

“尹 보은인사·위장전입 문제” vs “잘못 인정·결격사유 없어”

〈野〉

〈興〉

이종석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서울대 법대 79학번...尹대통령 동기 6차례 위장전입으로 역대 시세차익 與, 박범계 전 장관 사례 들며 반발이 “위장전입 사과...사퇴의향 없어”

여야가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사적 인연, 위장전입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끝났다면서,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의혹을 받았지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두고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하거나, 위장전입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도덕성 공세를 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이며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청구했던 검사장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후보자가 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오른쪽)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건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부문을 집중 추궁했다.

진선미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현 대통령과 관할 지역이 겹친 기간과 근무지를 밝혀달라는 질의에 특별히 기어나지 않는다고 답을 했다.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 정리해서 제출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관할지 중복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서면 답변 드렸다”며 “제가 중앙지법이나 고법 근무할 때 윤 대통령이 중수부나 이 런데 근무하면 중복된다고 봐야하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같은당 이탄희 의원은 “관할지 문제는 판단의 여지가 없다. 후보자는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가치 평가 문제는 국민들과 같이 할 문제”라며 “그 판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본인이 근무했던 것에 대해 다 제출을 하고 윤 대통령 경력에 따른 것도 제출할 수 있으면 하고, 판단은 청문위원이 하는 것이니 자료는 제출해 달라”고 동의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민주당은 윤대통령

과 이 후보자의 친분을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잔여) 임기가 1년도 안 되는데 대통령께서 지명한 것을 보면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수진(비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기각을 결정해 보은인사인지 모르겠다”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김미에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청문회를 거쳤다. 검토해보니 헌재소장으로서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위장전입이 주요 이슈였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고위공직자로 그런 잘못이 있다는 건 더 잘못했다며 정중히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에 대해 여러 비판거리는 없어 보인다. 가장 큰 것이 윤 대통령 대학동기라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과거 위장전입 문제도 다시 소환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 화곡동, 거여동, 반포 등을 위장전입을 6차례 하고 역대 시세차익을 남긴 것을 거론하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질었다.

김 의원은 “후보자에게서 재산신고

쪽 해 오다가 2007년부터 부모 재산을 고지거부하기 시작했다”며 “그때까지 신고된 부모 재산은 금융자산이 6300만원이었고 고지거부 증빙제출을 하면서 부모 재산을 봤더니 금융자산이 6억400만원. 10배가 증가했다. 건강도 안 좋고 특별히 소득활동 안하시는데 어떻게 10배나 증가했는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민주당 소속) 박범계 전 장관은 아들이 열세 살이었을 때 대치동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사퇴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2018년 청문회 때도 말한 것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한양아파트는 낡은 아파트를 사서 20년간 살다 재건축으로 시세차익을 본 것이라 해명했다. 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위장전입으로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사퇴한 적이 있다며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없다”고 일축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이재명 “국민 눈높이 맞춰 인재 발굴할 것” 국민의힘, 내년 ‘약자복지’ 중점 예산 확대

민주당, 인재 추천 프로그램과 인재 국민추천제 본격 가동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영입을 위해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하시거나, 아니면 자원에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겠다”며 “당 홈페이지도 인재위원회 이메일이나 팩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 또 민생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 극복, 한반도 불안한 정세를 안정화시키는 일 그리고 국민들을 갈갈이 짚어 놓고 있지만, 통합을 통해 미래 개척하는 일 등 이런 일들을 훌륭하게 민주당과 함께 수행해 낼 많은 인재들의 추천과 지원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인재 추

천 프로그램 ‘인재 국민추천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재명 당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대비해 인재영입에 직접 나선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표는 인재영입 방향에 대해 “우리 경제 민생 상황이 매우 어렵고 민생 회복이 핵심적 과제이기 때문에 미래 과학기술, 경제 회생에 도움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인재 국민추천제’는 연령, 성별, 경력 등을 불문하고 평범한 시민부터 전문가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인재 추천 풀을 확장해,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與 혁신위, ‘3차 혁신안’ 보고... 불출마·힘지출마는 재논의

청년전략지역구 선정, 논란 예상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3차 혁신안을 보고받는다. 혁신위는 앞서 청년 공천과 관련한 3차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혁신위가 권고한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계) 불출마 혹은 힘지 출마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가 끝난 내달 재논의할 전망이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혁신위는 오는

16일 3차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다. 3차 혁신안에는 ▲당선권 비례대표 순번에 청년 50% 공천 ▲당선 우세지역 청년전략지역구 선정 ▲전 정부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청년 위원 일정 비율·참여 확대 의무화 권고 등이 담겨 있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청년 비례대표 50%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청년전략지역구 선정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세지역

이란 국민의힘의 ‘뒷받’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지역의 현역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지난 2014년 새누리당 시절엔 여성우선지역구를 선정하려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는 혁신위가 2차 혁신안과 함께 권고한 지도부·중진·친윤계 불출마 혹은 힘지 출마를 예산국회가 끝난 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의 활동 기한은 내달 24일까지다.

/서예진 기자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 제시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 ‘2024 국민도약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약자 복지’를 중점으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을 대폭 늘렸다고 13일 밝혔다. 또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도 증액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2024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최우선 정책 과제를 약자 복지로 정했다”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대인 21만3000원 인상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총 인상액인 19만6000원보다도 큰 폭으로 인상했으며, 장애인 예산은 8.6%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으로 60세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을 총 3년으로 1년 더 늘리고, 양육부담 완화와 아동의 미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8.7%다. 이는 총지출 증가율

(2.8%)의 3배 이상이다.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현장의 우려를 산바 있다.

기초연구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불안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 3000명을 현장인력으로 전환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마약의 국민일상 침투를 막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마약중독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하겠다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지출규모 증가율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전세계적 3고(高) 위기(고금리·고물가·고환율)가 심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 가구당(4인 기준) 값어치 할 나라빚이 9000만원에 달한다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전 정부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